



# 점진적 무상화 공약 10년 : 고등 교육의 무상화를 목표로

와타나베, 아키오

梁, 洙京(翻訳)

---

(Resource Type)

other

(Version)

Author's Original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0100476369>



## 점진적 무상화 공약 10년~고등 교육의 무상화를 목표로~

와타나베 아키오 (전 고베 대학 교수)

본지 2019년 12월호에서 「교육 무상화와 장학금 문제」에 대한 특집이 편성되어, 필자는 「권리로서의 교육 무상화」라는 제목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점진적 무상화, 교육 무상화의 법 원리, 의무 교육·고등학교 교육·대학 등 교육 각 단계에서의 교육 무상화에 대한 생각의 전환과 정책의 변화·진전에 중점을 두고 논하였다. 본고에서는 국권의 최고 기관인 국회 심의를 쫓는 형태로 점진적 무상화 공약 10년의 도달과 과제를 밝힌다.

### 고등 교육 점진적 무상화 시대로

외무성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사회권 규약) 제 13조 2(b) 및 (c)의 규정에 관한 유보의 철회(유엔에 대한 통고)에 대해서 2012년 9월 ([https://www.mofa.go.jp/mofaj/gaiko/kiyaku/tuukoku\\_120911.html](https://www.mofa.go.jp/mofaj/gaiko/kiyaku/tuukoku_120911.html))에는, 「이 통고에 의해, 일본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이러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들 규정에 말하는 『특히 무상 교육의 점진적인 도입에 의해』 구속되어 집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유보 철회로 인해 점진적 무상화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조항에 구속되게 된 것이다. 즉, 2022년은 점진적 무상화를 국제 공약으로 삼은지 바야흐로 10년이다.

3기에 걸쳐 되돌아 보자<sup>(1)</sup>.

#### (1) 국제 인권 규약 유보 포함 체결(제 1기 1978~1979)

국제 인권 규약(A·B 규약 모두 1966년 유엔 총회 채택, 1976년 발효) 초기 비준 문제가 불거진 것은 1978년 제 84회(정기 국회 1977.12~1978.6)이다. 그리고 1979년 제 87회(정기 국회 1978.12-1979.6)에서 실질 심의되어 3가지 유보와 1가지 해석 선언을 한 형태로 비준이 승인되었다(1979.6.21 체결).

당시 심의의 특징은, 첫째로 「인권 존중」에 대한 강한 의지이다(소노다 스나오(園田直) 외무 장관의 제안 이유 「인권 존중은 일본 헌법을 지지하는 기본 이념 중 하나」 「계약 체결은 우리 나라 인권 존중의 자세를 재차 내외에 천명한다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국제 사회에서의 인권 존중 보편화에 한층 더 기여하는」 84중·외무위 24호·1978.6.14).

둘째, 유보 없음이 바람직한 모습이며, 「유보 사항은 점차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정부 답변(87중·외무위 4호 1979.3.16) 및 유보 사항의 장래 검토를 포함한 부대 결의에 대한 만장 일치 승인이다.

셋째로, 점진적 무상화 조항에 관해, 후기 중등 교육 및 고등 교육에 대해 사립 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라도 진행할 만큼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유보하되, ①앞으로도 기회 확보를 위해 사학 조성, 육영 장학, 수업료 감면 조치 등의 충실에 노력할 것, ②중등 교육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정부 답변이다(87참·외무위 11호·1979.5.22, 나이토 다카사부로(内藤誉三郎) 문부대신).

제 1 기의 심의에서는, 「중등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을 우선 진행한 후, 유보 철회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고교 무상화의 2010년 도입과 이를 토대로 한 2012년 유보 철회까지 무려 33년, 3분의 1 세기나 되는 기간이 필요했다.

## (2) 고교 무상화와 유보 철회(제 2 기 1979~2012)

유보 철회를 향해 실제로 움직인 것은 민주당 정권(2009.9~2012.12)이 들어서고 나서이다.

정권 교체 후 첫 2009년 제 173회 국회(임시회 2009.10-12)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육아나 교육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사회 전체가 서로 돕고 부담한다는 발상이 필요하다」「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 나라, 육아나 간호를 위해서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하겠다고 소신 표명하고 있다(173 중·본회의 1호·2009.10.26).

2010년 제 174회(정기회 2010.1-6)에서는 고교 무상화법이 성립되어 2010년도부터 실시되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시정 방침 연설에서 「고등 교육의 단계적인 무상화 조항에 대해서도 그 유보 철회를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교육 격차를 없애기 위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174 중·본회의 4호·2010.1.29).

그리고, 2012년 제 180회(정기회 2012.1-9)에서, 겐바 코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 대신은 「고등학교의 실질 무상화라는 것이 시작된 지 3년째」「대학 교육도, 지금 경제적인 부담 경감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리고 있다」라며, 「유보에 대해서는 철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이번에 사무 측에 지시를 했다」라고 밝혔다(180 중·예산위 6호·2012.2.9).

유보 철회 후 2012년 제 181회(임시회 2012.10-11)에서 미야모토 다케시(宮本岳志) 의원(일본 공산당)이 「국제 공약이 된 중등 교육, 고등 교육에 대한 무상 교육 단계적 실현을 향해 어떤 결의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타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문부 과학부 장관은 「가정의 경제 상황에 관계 없이,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교육비 부담 경감에 노력해 가는, 이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응답했다(181 중·문부 과학위 2호·2012.11.7).

## (3) 고등 교육의 점진적 무상화의 시대에(제 3 기 2012~현재)

2013년 제 183회(정기회 2013.1-6)는 선거 공약으로 고등학교 무상화에 소득 제한 도입을 내건 자유 민주당이 정권에 복귀한 국회이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 과학부 장관은 점진적 무상화 조항에 구속되는 것에 대해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며, 우리는 한층 더 사적 부담, 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183 중·예산위 17호·2013.4.1).

그리고 「이번 제도 개정은 소득 제한에 따라 어렵게 조성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충 등을 충당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의 적정화를 도모하며, 교육 기회 균등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것」「제도 전체로서 현행법의 목적을 더욱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전체가 고교 단계의 배움을 뒷받침한다는 이념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답변했다(185 참, 본회의 8호, 2013.11.20).

2014년 제 186 회(정기회 2014.1-6) 이후에 점진적 무상화에 관한 심의 테마는 후기 중등 교육에서 고등 교육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고등 교육에 대해 「국제 인권 규약의 취지를 근거로, 가정의 경제 상황에 따라 학업을 단념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의 충실에 노력해 나가겠다. 당연히 철회는 유지해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186 중·예산위 9 호·2014.2.17).

2012년 복귀한 자유 민주당 정권도 겉으로는 점진적 무상화를 부정하지 못하고 그 취지를 존중·준수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다. 꿈쩍 못하게 올라가는 의미는 크다. 하지만 불충분한 점을 가지고 있는 소득 연동 반환형의 도입(2017), 한정적이긴 하지만 최초의 급여형 장학금 개시(2017 선행 실시, 2018 본격 실시) 등, 행보는 매우 완만하다.

고등 교육 무상화 법안으로 널리 알려진 대학 등 수학 지원법(2019 성립, 20 시행)은, 실제로는 아동의 빈곤 대책에 관한 대강(大綱)(2019)이나 저출산 사회 대책 대강(2020)에 근거한 내각부 소관 사항의 일환이며, 「진정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저소득층) 한정 정책에 머물고 있다.

## 고등 교육의 점진적 무상화에 대한 지지부진한 행보 그 요인

### (1) 요인 ① 의무를 준수할 의지가 없다

유네스코 인권 평화적으로 있는 국제 인권법 전문의 폰 쿠먼스 교수(Fons Coomans,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Maastricht University))는 「점진적 무상화」 과학 연구 심포지엄(2018.1.28)에서 국제 인권 A 규약 13 조 「교육에 대한 권리」를 기본 인권으로 파악하는 중요성 및 A 규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실행시키는 것은 어려움을 수반한다」며 흥미로운 고찰을 실시하고 있다. 즉, 의무 불이행의 계약국에는 「의무를 준수할 능력이 없는 inability」 국가와 「의무를 준수할 의지가 없는 unwillingness」 국가의 2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sup>(2)</sup>. 2013년 이후 정부의 대응 자세는 후자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정부는 2018년 5월 31일까지 A 규약에 관한 제 4 회 정부 보고를 유엔에 제출해야 했으나 미제출인 채로 4년이 지났다.

둘째, 점진적 무상화를 추진하는 전체 구상과 공정표를 제시하려는 의지가 없다(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문부 과학 장관 「문부 과학성으로서는 재정이나 진학률 등 그때 그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노력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스케줄이나 예산, 재원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제시하는 것은 곤란」 198 참·본 회의 13 호·2019.4.19).

셋째, 점진적 무상화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방패로, 한정적인 대응을 정당화하며 끝냈다(질문 제 234 호 2020.6.5 에 대한 정부 답변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각각 판단하는 것으로 인식」 201 중·본 회의 34 호·2020.6.17).

덧붙여 넷째로, 국제 인권 규약의 후퇴 금지 원칙을 지킬 의지가 없다(미야모토 토오루(宮本徹) 의원 「(대학 등 수학 지원법의 2020년 실시에 의해 감면 가능한 수입 기준이 낮아짐). 종래의 감면을 신입생에게 유지한 것은 동대 등 다섯 개 대학에 머물렀다」 「후퇴 금지 원칙과의 관계에서 위반」 201 중·결산 행정 감시위 제 2 분과회 1 호·2020.4.6).

## (2) 요인② 고등 교육의 권리성 파악의 약점

그런데, 2010년 고등학교 무상화 법은 고등학생 자신을 권리 주체로 하는 제도 설계였다. 고등학교 무상화 법안의 의의에 대해, 야마시타 에이치(山下栄一) 의원(공명당, 당시 야당)은, 보호자가 아니라 「이 법안에서는 수급권자가 본인」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며, 「자립 지원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하면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가와바타 타츠오(川端達夫) 문부 과학 대신도 「기본적인 이념은 아동, 즉 학생의 학습 권리를 그 학생에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174 참·문교 과학위 5호·2010.3.25). 고교생 자신을 수급권자(학교 설치자가 수급권자를 대신해 수령)로 함으로써, ①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관계 없이, ②배우는 고등학교 등의 설치 주체(국공사립)에 관계 없이, ③ 배우는 자의 연령에 관계 없이(지급 기간 36개월 [정시제·통신제는 48개월] + 2014년 이후부터는 재학습 지원 있음), 배울 의지가 있는 모든 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014년 소득 제한(모델 가구로서 연 수익 910만엔 미만)이 도입되어 ①에 대해서는 번질되고 있지만, 장래적인 소득 제한 철폐를 포함한 부대 결의(185 중·문부 과학위 5호·2013.11.13, 185 참, 문교과학위 4호, 2013.11.26)는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런데, 대학 등 수학 지원법도 수급권자를 학생 등으로 함으로써 ②는 해당하고 있으며, 1979년 유보의 최대 사유였던 사학 문제는 중등 교육·고등 교육 모두 이미 해결되고 있다(일본 국헌법 89조 [공공 재산의 지출 제한] 등에 걸리지 않도록 기관 보조를 피해 개인 보조로). 한편 ①③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는 요인은 고등 교육의 권리성 파악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고등 교육을 「국가 지적 기반」 「사회 발전 기반」 「국가 인재 개발」 등의 관점에서 논하는 풍조가 강하지만, 「고등 교육은 자유롭고 열린 사회에서 모든 시민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권리」 「고등 교육을 받을 자격은 배울 각오와 의사뿐이어야 한다」 「고등 교육은 다양한 흥미나 목표를 가진 시민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 크리스토퍼 마틴(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의 「고등 교육 권리: 정치 이론」은 시사적이다(3).

## 고등 교육 점진적 무상화 개척 돌파구

### (1) 돌파구① 재원·예산 확보~수업료 반액화·입학금 재검토

대학 등 수학 지원법이 성립했을 당시 부대 결의(198 중·문부 과학위 8호·2019.4.10, 198 참·문교 과학위 7호·2019.5.9)의 두번째에는, 「정부는, 본 지원 제도의 안정적 운용 및 더 나은 고등 교육에 있어서의 교육비 부담 경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에 노력할 것」이 제시되고 있다. 알다시피 대학 등 수학 지원 사업의 재원은 소비 증세 2%분의 사용처 변경에 따른 것으로, 대상을 중간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

OECD 조사(4)에 따르면, 고등 교육에 대한 공재정 지출 대 GDP 비(2018년)는 OECD 회원 38개국 평균이 0.9인 반면, 일본은 0.4로 룩셈부르크와 나란히 최하위였다. 덧붙여, 2002년 조사 시점에서 최하위였던 한국(0.4/일본 0.5)은, 2012년부터 급부형 국가 장학금을 본격화시키기도 하며, 일본을 제치고 0.6이 되었다. GDP 비를 1% 확보하는 것

만으로 일본의 고등 교육에 대한 공재정 지출은 지금의 2 배가 넘는다. 고등학교 무상화가 공립 수업료의 상당액인 9,900 엔을 사학의 취학 지원금으로 시작한 것을 모방하여, 예를 들어 국립대생의 등록금 반액 면제(약 27 만엔)에 더하여, 그 상당액을 사립 및 공립 대학생에게도 지원하기 위해 대학원·단대·고등전문학교 전문 과정·전수학교 전문 과정을 모두 포함하면 「약 1 조엔」의 시산(試算)이 된다(5). 「수업료 반액화」는 어쩌면 실현 가능하다(수업료의 설정액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는 「수업료 부담 반액화」가 될 것이다).

부대결의 첫번째에 있는 「(A 규약의) 『무상 교육의 점진적인 도입』 실현을 위해 정부는 교육비의 부담 경감책 마련」을 진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권리 향유의 저해 요인이 되는 「수업료 및 다른 직접적인 비용」(198 중·문부과학위 5 호·2019.3.22, 하타노 키미에(畑野君枝) 의원에 대한 외무성 답변)에 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점에서 입학금의 중복 지불을 피하기 위해 「입학금 납입 기한을 3 월 말로 지정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학생 서명이 퍼지며(<https://www.change.org/p/> 문부 과학성·입학하지 않는 대학에는 입학금을 내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입학금을 없앤 한국을 예로 들어, 국회에서 고액 입학금의 근거를 규명하고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싶다(208 참·예산위 20 호·2022.6.3, 야마조에 다쿠(山添拓) 의원/입학금을 포함한 첫 해 납부금은 국립 817,800 엔, 사대 평균 1,176,800 엔 정도/한국의 동향으로부터 배울 것은 입학 절차에 필요한 실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법이다).

## (2) 돌파구② 대학 등 수학 지원 사업의 확대 확충, 생활보호대상가구의 대학 진학

대학등 수학 지원법은 시행 후 4 년이면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부칙 3 조).

첫째, 계상 예산조차 다 쓰지 못하는 불요액(不要額) 문제가 있다. 급부형 장학금에 대해서는 51 만명분을 예산 계상한 반면, 2020 년도에 27 만명(실시율 53%), 21 년도에는 32 만명(63%)이라는 실적이었다(208 중·문부 과학위 5 호·2022.3.30 스에마쓰 신스케(末松信介) 문부 과학 대신). 예산 전액 집행을 통한 확대 확충은 당장 착수 가능하다.

둘째, 어느 당파나 그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는 방향을 표명하고 있으나, 문제는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이다. 교육 미래 창조 회의는, 학부에서의 이공 농학계·다자녀 가구 우선, 대학원에서의 일본판 졸업후거출금제도(J-HECS)를 제언(제 1 차 제언 2022.5.10)하고 있지만, 향후 국회 심의에서는 「모델 가구에서 연수입 590 만엔 미만」까지의 확대가 초점이 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고 수업료·저 보조」국가로 분류되어 왔지만, 한국은 한발 앞서 그 분류에서 벗어나고 있다(도표 1). 국공립 연간 평균 수업료(학사 과정)는 한일 모두 약 5,000 달러(6)이지만, 저소득층 한정의 대학 등 수학 지원법에 의한 일본의 보조율은 10~15% (2020-21)에 머무른 반면, 급부형 국가 장학금 대상을 중간층 이상으로 넓힌 한국의 보조율은 40% 정도(2019 봄학기)(7)라고 한다.

이에 관련하여, 법제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가에 의한 사립고교 실질 무상화(2020, 전일제 수업료 평균액 396,000 엔 지급)에서는 이미 「모델 가구에서 연수입 590 만엔 미만」까지 확대하고 있다(오사카 공립 대학이 학비 전액을 면제해 주는 수입 기준이기도 하다). 고교 단계에서는 수업료에 충당하는 취학 지원금과는 별개로,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학 급부금(의무 교육 단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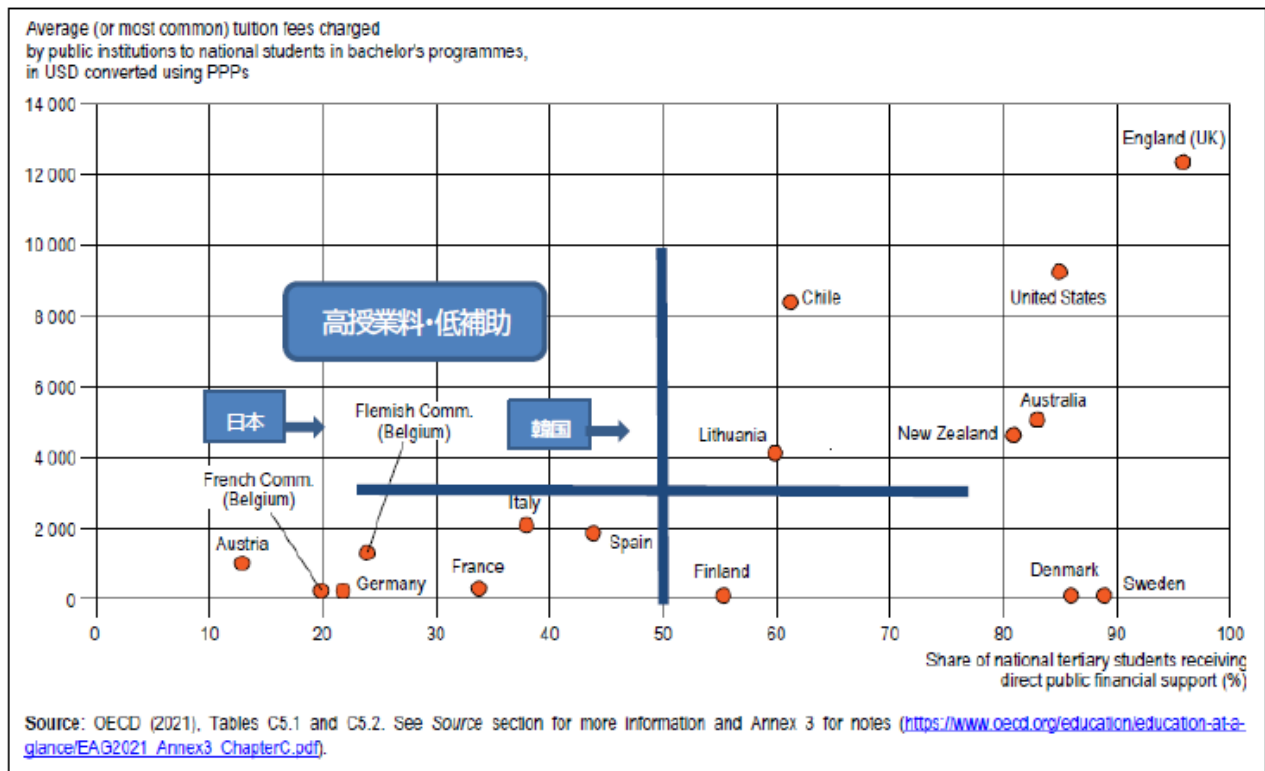


图 1. 平均年間授業料\*及び公的財政補助学生率\*\* (2019-20 学年度) OECD2021+渡部 2022

취학 지원에 상당)이 있어, 그 대상은 생활보호대상가구 및 주민세소득할(所得割)비과세 가구(연수입 약 270 만엔 미만)이다.

대학수학지원법에 의한 제도 건립의 단점은 지금까지 학비 감면 대상이었던 중산층을 버리고(후퇴 금지 원칙에 저축), 취학 지원에 상당하는 급여형 장학금의 낮은 수입 기준을 학비 감면과 묶어버린 것에 있다. 급여형 장학금은 별도로, 우선 학비 감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길도 있을 것이다.

셋째, 2021~22 년 국회에서는 그 밖에도 고교 졸업 후 2 년 이내라는 요건 개편(205 중·본회의 5 호·2021.10. 14, 와세다 유키(早稻田夕季) 의원·질문·질문 주의서), 가계 급변 사유에 학대로부터의 피난도 추가(208 참·예산위 18 호·2022.5.30, 미우라 노부히로(三浦信祐) 의원), 자립지원홈의 아이들을 자택 밖 통학으로 규정하고(208 참·후생 노동위 16 호·2022.5.24, 야마모토 가나에(山本香苗) 의원),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에서 4 년제 대학으로 편입시의 차별 해소(208 참·지방 창생 및 디지털 사회 형성 등에 관한 특별위 10 호·2022.5.20, 이쇼자키 테즈시(磯崎哲史) 의원)에의 문부과학성 답변), 소득에 의한 지원에서의 「계단상의 절벽」 개선(208 중·예산위 19 호·2022.5.26, 키이 타카시(城井崇) 의원), 성적 요건의 재검토(208 참·문교 과학위 9 호·2022.5.12, 키라 요시코(吉良よし子) 의원) 등의 검토 과제가 제시되었다(8).

아울러 자녀 빈곤 대책의 관점으로부터의 문제 제기로, 생활보호대상가구의 대학 진학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학 등 진학률(2020.3)에 있어 생활보호대상가구 37.3%, 전체가 73.4%(현역생)인 현 상황에 대해 「이렇듯 큰 격차는 시정되어야 한다」(208 참·내각 위 8 호·2022.4.7, 다무라 도모코(田村智子) 의원), 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를 포함한 고등 교육기관 진학률(2020 년도 83.5%)도 80%를 넘었으므로 「대학 등 진학에 의한 가구 분리를 중지할 수는 없는(가)」(208 참·후생 노동위 9 호·2022.4.21, 우치코시 사쿠라

(打越さく良) 의원), 대학 진학자를 「생활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208 참·후생 노동위 17호·2022.4.27, 가와사키 히데토(川崎ひでと) 의원) 등이 있다. 일반 진학을 80% 초과 시점에서 생활보호대상에 고교 진학을 인정한 것처럼 대학 진학도 추가해야 할 지점에 일본 사회는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3) 돌파구③ 자치체&대학법인 등으로부터 푸쉬되는 점진적 무상화**

교육기본법(4 조: 교육의 기회 균등)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경제적 이유로 인한 수확 곤란자에 대한 장학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도부현(都道府県)에 머무르지 않고, 시정촌(市町村)에도 급부형 장학금, 장학금 반환 지원 제도, 이자 보충 제도 등이 준비된 곳이 있다. 자치체의 우수 사례(Good Practice)를 수집 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9). 또한 대학 법인·학교 법인의 대처에 대해서도 각 대학 등이 공표하는 것은 물론 문부 과학성이 가진 정보를 일람하게 하여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치 단체&대학 법인 등에서 푸쉬하는 점진적 무상화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소구분/레벨	국가	지방	법인	민간
<b>A</b> 학비	A1: 학비 자체 경감화				
	A2: 학비감면제의 충실				
<b>B</b> 장학금· 학생대출 등	B1: 급부형 장학금의 충실				
	B2: 무이자 학생대출 개선				
	B3: 유이자 학생대출 축소				
	B4: 학내 근로 장학금의 충실				
<b>C</b> 수확 지원	C1: 학습비의 지원				
	C2: 학생 생활비의 지원				
<b>D</b> 취업지원 생활보장	D1: 취업 지원				
	D2: 생활 보장				

필자들이 시작한 「점진적 무상화 프로그램(고등 교육판)」(표 1)은, 세로 항목에 A 학비, B 장학금·학생 대출 등, C 수확 지원, D 취업 지원·생활 보장의 4 개 항목을 마련하고, 가로 축에 나라, 지방(도도부현·시구정촌), 법인(대학 법인·학교 법인), 민간을 두어, 총체적으로 점진적 무상화 현상을 체크해 나가며 진전시키는 틀이다.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0).

**【비고】**

본 논문은 JSPS 과연비 15H03474(2015-17 약칭 「점진적 무상화」 과연), 19K02864(2019-21 「점진적 무상화@한일」 과연) 및 22K02702(2022-25 「한일/한일 대화」 과연)의 연구 성과에 의한 것이다. 점진적 무상화와 관련된 정보를 거의 매일 트윗하고 있다(<https://twitter.com/JinkenNet>). 또한 2022년 9월 17일(토) 오후, 대화 기획③ 「휴먼라이츠로서 국제인권규약」을 온라인으로 예정하고 있다.

(안내 URL <http://www.jera.jp/20220427-2/>,

신청 URL <https://forms.gle/EJ8gCahrinZHnzPw7>).

**(주석)**

(1) 와타나베 아키오(渡部昭男) 2021 「국제 인권 A 규약에 관련된 『점진적 무상화』 논의의 경위와 특징—1978년 제 84 회~2020년 제 203 회의 국회 심의로부터—」

<https://hdl.handle.net/20.500.14094/81012777> 를 참조.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https://kokkai.ndl.go.jp/#/> 으로부터의 회의록 인용시에는 (회차와 원명·회의명과 회의록 호수·연월일) 을 표기했다. 국회 심의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사이트이므로 독자에게도 활용을 권장한다.



(2) 폰 쿠먼스 2018 「교육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향해 : 국제 인권 A 규약 제 13 조의 관련 성과 오늘날의 의의」(원문 및 일본어 번역) <https://hdl.handle.net/20.500.14094/81010074> .  
와타나베 아키오 2019 「능력·빈곤으로부터 필요·행복 추구에」일본 표준, 5-9.

(3) Christopher Martin, *The Right to Higher Education: A Politic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나고야 대학의 이시이 타쿠지(石井拓児) 교수의 소개).

(4) OECD2021 『도표로 보는 교육 OECD 인디케이터(2021년판)』 아사키 서점(明石書店), 294 「표 C2.4」의 「고등 교육·최종 지출」. 2002년 조사에 대해서는, 와타나베 아키오 2006 『격차 문제와 「교육의 기회 균등」』일본 표준, 55.

(5) 전술(前掲) : 와타나베 아키오 2019, 9-10.

(6) 전술 : OECD2021, 339, 「표 C5.1」. ISCED6 (학사 과정) 에 일본 5,177USD, 한국 4,792USD 라고 보고되고 있다 (2019-20년도) .

(7) 연덕원 2020 「한국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https://hdl.handle.net/20.500.14094/81012445>.

(8) 와타나베 아키오 2022 『『교육 무상화』 논의의 경위와 특징—2021년 제 205회~2022년 제 208회 국회 심의로부터—』 <https://hdl.handle.net/20.500.14094/90009573>.

(9) 와타나베 (키미와다) 요코 (渡部 (君和田) 容子) 2022 『교육비 지원 정보에 관한 지자체 홍보 방식』(필자와의 과연비 공동 조사 보고서: 47개 도도부현, 20개 정령지정도시, 20개 중핵시 [추출], 23개 시행시 특례시 등 총 110개 지자체)

[https://kindai.repo.nii.ac.jp/index.php?action=pages\\_view\\_main&active\\_action=repository\\_view\\_main\\_item\\_snippet&index\\_id=4754&pn=1&count=20&order=17&lang=japanese&page\\_id=13&block\\_id=21](https://kindai.repo.nii.ac.jp/index.php?action=pages_view_main&active_action=repository_view_main_item_snippet&index_id=4754&pn=1&count=20&order=17&lang=japanese&page_id=13&block_id=21). 와타나베 아키오 2022 「오사카부(大阪府) 및 부하(府下) 43개 시

정촌의 교육비 지원 정보에 관한 홍보 방식」 <https://hdl.handle.net/20.500.14094/81013313>, 와타나베 (키미와다) 요코·와타나베 아키오 2022 「돗토리현(鳥取県) 및 현하(県下) 19개 시정촌의 교육비 지원 정보에 관한 홍보 방식」 <https://hdl.handle.net/20.500.14094/90009330>.

(10) 활용 사례로서, 와타나베 아키오 2020 「고등 교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수학 지원에 관한 법·제도·행재정 한일 비교 연구(1)」 <https://hdl.handle.net/20.500.14094/90007500>

부표(附表), 와타나베 아키오 2022 「코로나 19 사태 고등 교육 배움의 지속을 위한 학생 지원 방향 논의: 2020년 제 203회·2021년 제 204회 국회 심의 분석을 중심으로」

<https://hdl.handle.net/20.500.14094/90009091> 표 2, 등.